

1980년대 한국 진보정치 세력의 정당관:

'보수야당 비판론'과 '전위정당론'을 중심으로

김윤철

##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1980년대 한국 진보정치 세력들의 정당관을 살펴보는 것이다. 관점은 태도와 행동방식에 영향을 준다. 거꾸로 태도와 행동방식이 관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론과 실천, 의식과 행위의 통일을 중시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글은 왜 한국의 진보정당은 민주화 이후 17년이 흐른 후에야, 즉 2004년이 되어서야 정당체제 진입에 '성공'했는지, 또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2014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주변부로 남아있는지 혹은 퇴출 위기에까지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즉 한국 진보정당의 '지연 및 지체' 현상을 '주체의 (선)인식과 그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은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등장해, 맑스-레닌주의 혹은 주체사상 등과 같은 변혁이념을 추종하며 새로운 국가와 사회체제-사회주의-

로의 이행을 목표로 활동해왔던 (비제도권) 정치운동 집단이다. 또 198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진보정당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기도 하다. 민중의 당-민중당(한국 사회주의 노동당-한국 노동당)-국민승리21-민주노동당-진보신당-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 등이 그 산물이다. 이들은 한국의 보수독점 양당체제 혹은 보수우위 다당체제에서 도전세력 혹은 제3세력으로 존재해 왔다. 결코 한국정치의 특성을 살펴 봄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 특히 중반 이후 정치조직 건설을 지향했던 주요 정파 세력들 (인민노련, 노동계급, 사노맹, 제파PD 등과 같은)의 논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이 생산한 문건과 책자 등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 대한 인터뷰-구술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기는 1980년대를 기본으로 하되, 진보정치 세력의 등장과 활동, 그리고 진보정당 논의가 1980년대말에서 1990년대초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해, 1990년대초의 논의도 포함할 것이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정당관이 1990년대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그리고 2000년대 진보정당 실험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 시기 설정 문제에 대해 본문 각주를 통해 밝히고 있으나, '1980년대'라는 역사적 시간대가 연도상의 1980년~1989년을 의미하는 것이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한국 정치(사) 연구 방법과 관련한 별도로 논의로 이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연대별 시기 설정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이 글은 정당관이 정당의 이념과 목표, 전략, 주체와 사회적 기반이 되는 집단 등을 핵심 요소로 해서 구성된다. 타 정당-특히 기성 정당-과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이다. 또 어떤 정당 모형을 추종하는지도 고려할 수 있다. 이때문에 이 글은 1980년대 한국 진보정치 세력이 내보인 특징적인 담론 실천, 즉 '보수야당 비판론'과 '전위정당론'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관을 살펴본다.

한편 이 글은 왜 1980년대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이 특정한 정당관을 갖게 되었는지 그 요인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지 않다. 지면상의 제약도 있지만, 일단 어떤 정당관을 가졌는지를 펼쳐 놓고 살펴보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본문 과정에서 각주 등을 통해 요인 분석에 참고가 될 텍스트들을 제시하였다.

## 2. '보수야당 비판론'을 통해 본 정당관

1980년대 한국 진보정치 세력의 정당관은 기성 정당, 특히 '보수야당'에 대한 시각을 통해 우선 확인할 수 있다. 진보정치 세력은 보수야당 비판을 1985년 2.12 총선과 개헌 정국 대응, 그리고 C-N-P 논쟁에서 시작한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진보정치 세력은 보수야당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차이를 보였다. 한편에서는 보수야당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적 힘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정치 세력이 추구하는 변혁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으로서 타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대와 타격을 둘러싼 자유주의 정치세력으로서의 보수야당과 체제변혁을 지향하는 진보정치세력 간의 관계 설정 문제는 1980년대 이후 운동 진영을 여러 정파의 노선으로 갈리게 하는 주범 가운데 하나였다. '주요 타격 방향', '일면 투쟁 일면 단결', '전략적 연대나 전술적 제휴냐', '타격을 통한 분할 견인' 등을 둘러싼 운동 진영 내부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던 것이다(조현연 2009, 52).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보수야당에 대한 시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범민주연합에서 야당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면서, 특히 민주당(YS), 평민당(DJ)의 차이를 강조하고 평민당과의 제휴에 적극적인 견해, 둘째, 범민주연합을 위해 야당과의 연대가 중요하되 일단 민족민주 세력과의 차별성을 확인한 연후에, 그것도 민족민주 운동세력이 정당이라는 구체화된 조직적 실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 뒤 연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셋째, 보수 지배세력과 민족 민주세력과의 '정면대결의 전장'에서 야당의 의미는 극히 부차적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김태일 1990, 52).

첫째, 둘째의 경우는 주로 진보정치 세력 중 다수파였던 NL계열(민족해방파)의 시각

이며, 셋째 시각은 소수파였던 CA(제헌의회파)와 PD(민중민주파)의 시각이다. 하지만 연대를 강조했던 (친)NL 측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 보수야당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아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를 살펴볼 때, 보수야당이 민족민주운동의 선두에 서서 투쟁하려고 했다거나 민족적, 민중적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려고 했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다만 1979년 이른바 선명노선 기치를 내걸고 투쟁한 것과 1986년 이후 헌법 투쟁 시기의 일련의 원외 투쟁 등 예외적인 사실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이것조차 예외가 아니라 그들의 계급적 속성의 다른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1979년이나 1986년 모두 청년 학생 노동자를 선두로 한 대중투쟁이 고양되어 나가고 민중들의 불만이 점증해 나가자 그때서야 비로서 어처구니 없게도 대중의 우두머리로 자처하고 나섰을 뿐이다...그들은 대중투쟁을 선도하여 지도하지 못하며 대중투쟁이 일정 정도 발전한 후에만 투쟁의 대오에 겨우 합류하기 시작하여 투쟁의 키를 부여잡고 자유주의적이며 부분적인 개혁으로써 자신의 집권에 유리한 공간을 조성하려고만 한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1989, 211).

보수야당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경우에도 이와 같음을 감안한다면, 진보정치 세력 전체가 보수야당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진보정치 세력 중 일부가 보수야당에 합류하지만, 이는 수차례에 걸친 통일전선운동-혹은 대중운동연합체 운동-과 진보정당 건설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이후의 일이었다.

1980년대 한국 진보정치 세력이 보수야당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은 단지 역사적 경험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성격에 대한 특정한 이해와 지향하는 대안체제의 특성에 바탕한 것이기도 했다. 즉 이론적, 사상적, 이념적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PD계열(민중민주파)의 한 정파-혹은 분파-이론가가 쓴 것으로 보이는 <민중민주운동론><sup>1</sup>은 (보수야당을 포함한) 부르조아정당들은 대의제 등의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종속적 정치단체일 뿐만 아니라 그 목표 또한 자본주의체제를 유지 수호하는데 두고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보수야당이 발 딛고 있는 부르조아 국가의 다당제와 의회제 역시 부르조아지가 자신의 계급지배를 위해 만든 정치적 지배장치와 국가권력의 형태와 방식에 불과하다고 파악한다. 그것의 본질과 목적은 자본주의적 착취를 강화하고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에 따라 노동자계급과 근로대중을 체제 안에 묶어두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허성혁 1988, 98:104).

이때문에 <민중민주운동론>은 자본주의 하에서 (다당제와 의회제 등을 통해-필자)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은 우익기회주의적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

<sup>1</sup> <민중민주운동론>은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의 과학성을 입증하고 민족민주주의혁명론이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의 과오를 찾아내는데 주력하였다"(허성혁 1988, 252)고 밝히고 있다. 진보정치 세력의 양대축이었던 CA(제헌의회파)계열과 NL(민족해방파) 계열 모두를 비판하면서 자기정립을 꾀했던 PD계열의 입장을 담고 있음을 알려준다.

다. 자본주의는 그 경제적 본질상 반민주적 색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독점 자본주의는 그나마의 민주적 제권리마저도 박탈하는 정치적 반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허성혁 1988, 105). 이때문에 <민중민주운동론>은 부르조아지의 지배권력에 맞서는 노동자계급 또는 노동자계급의 세계관이 관철되는 사상중심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허성혁 1988, 277).<sup>2</sup>

CA(제헌의회파) 계열<sup>3</sup>은 보수야당만이 아니라, 기성의 정치질서, 즉 부르조아 정당-선거-의회제도를 (적극) 수용한 해외 '진보정당'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한국의 보수야당만이 아니라, 국내외 기성 (진보)정당들로 비판의 지평을 확장한 것이다.

PD 계열의 정파 중 하나인 <노동계급> 역시 사회주의 체제 이후에 대해 논하면서 의회정당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선보인다. "당의 성격을 서구식 의회정당으로 변모...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대의제적 국가기관(=의회)에서의 활동이 이전보다 중요해진다고 하더라도 당의 활동을 의회 내에만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이진경 편 1991, 312).

---

<sup>2</sup> 이에 대해서는 '3장 전위정당 건설론을 통해 본 정당관'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sup>3</sup> 이들은 노동해방투쟁동맹(노해동 소수파)-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회당추진위원회(사추위)-민중정치연합(민정연)-진보정치연합 등으로 이어지면서 진보정치세력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갔다.이들을 비롯한 NL-PD 계열 등의 진보정치세력들의 형성과 분화 등에 대해서는 유경순(2009) 참조.

CA계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노동해방문학>을 잇는 이론 사상 논쟁지 전문무크지인 <우리사상>은 유로코뮤니즘의 정당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우리사상>은 소연방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이후인 1992년(1월)에 나왔다. 하지만 1980년대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는 글<sup>4</sup>을 실으면서 1984년에 쓰여진 문건에 기초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노동운동 내에서 과학적 이념의 경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운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명주의자들은 그에 적합한 무기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무기는 노동자의 이익과 자본가의 이익이 화해할 수 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임을 노동자 앞에 명백히 제시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성취해야 할 다가올 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 및 제 조건을 그들에게 명확히 하며,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의 일체 현실들을 지도할 수 있는 혁명적 계급을 만드는 것이다." (노해동 <혁명적 피티 전위당의 조직 계획>, 1984년 4월 - 김정명 1992, 35에서 재인용)

<우리사상>은 4년 전(1984년)에 발간된 위의 문건이 왜 우리가 사회주의노동자당을 만들고자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면서, 우리는 노동자계급 해방투쟁의 무기로서 당

---

<sup>4</sup> 본문을 볼 때 <우리사상>에 실은 이 글은 1988년에 처음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때는 진보정치 세력이 정당(전위정당 혹은 전위조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때이다. 즉 이 글은 애초 '1980년대 텍스트'이다.



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사상>은 기성 정당과 자신들을 구분하고 있다. 즉 자신들은 보수야당을 포함한, 기성 정당들과 같은 '체제수호에 봉사하는 계급협조정당'이 아니라, 노동자와 피지배계급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 모든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진보정당, 현존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운동을 펼쳐나갈 참된 혁명정당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김정명 1992, 35).

이 관점의 선상에서 <우리사상>은 이탈리아와 공산당과 일본 공산당 등을 비판한다. 유로 코뮤니즘의 원조 이탈리아와 공산당이나 그것의 수용한 일본 공산당의 노선은 당의 성격을 '전인민의 당'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당의 성격 자체에서 '전위적 성격'을 폐기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 전체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입장을 약화되고, 사회주의보다 노동자와 근로 민중의 경제적 이익에 주안점을 돌리게 되어, 점차 당의 '계급투쟁의 무기'라는 성격을 희석화시켰다는 것이다. 즉, 여러 계층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데 중점을 두는 '다원주의'가 전면에 등장하게 됨에 따라 당의 투쟁성이 약화되고, 합법주의, 의회주의가 심각화되었다는 것이다(김정명 1992, 38).<sup>5</sup>

---

<sup>5</sup> 다만 프랑스 공산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은 조직노선에서 노동자계급정당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회주의의 한계를 똑같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의 전위적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고 있다. 이것이 프랑스공산당이 유로코뮤니즘 공산당 중 상대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명 1992,

<우리사상>은 자신들의 관점은 유로코뮤니즘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80년대에 이어 -소연방의 해체 등 현실 사회주의권 몰락과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도 혁명주의와 전위주의를 계속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유로코뮤니즘은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여타 계급의 지지를 획득하는 목적을 확대해석하여, 당의 성격을 ‘근로민중의 당’이라는 것으로 해소해 버렸던 반면, 우리는 근로민중 속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키어내고, 그들과 사회주의(노동해방)이라는 이념적 지향 위에서 하나가 되고자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의회주의 내지 개량주의로의 해소에 반대하고 혁명주의와 전위주의를 계속 견지하게 되는 이유이다.” (김정명 1992, 39).

<우리사상>이 보수야당만이 아니라 해외의 기성 진보정당들에게까지 비판하고 나선 이유, 또 정당 건설을 제안하고 나선 이유는 <민중민중운동론>의 시각과 대동소이하다.

“자본가계급은 자신의 계급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마치 그들이 여타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듯이 행동한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여타 근로계층 전체를 착취하는 계급이다...이러한 자본가계급과의 민중 간의 숨겨진 계급적

---

38).

진실을 밝히는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김정명 1992, 39).

진보정치 세력은 이러한 관점을 1990년대초에 들어서도 유지하고 있다. 역시 PD계열 정파의 이론가가 쓴 것으로 보이는 <남한사회 변혁논쟁의 현단계>는 진보정치 세력이 만들어야 할 정당의 목표를 자본주의 개량이 아닌, 자본주의 폐지를 위한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인 정당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역시 보수야당은 물론, 유로코뮤니즘-사회민주주의 정당과 같은 정당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정당이여야 하는가는 분명하다. 자본주의를 개량하기 위한 변혁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폐지하기 위한 변혁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당이 아니면 안된다. 왜냐하면 노동자계급만이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대립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정한 1993, 166).

유로코뮤니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사회주의 혁명과 전위정당 노선 - 혹은 통일전선체에 기반한 대중투쟁노선- 을 '사실상 폐기한' 현재의 진보정당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로코뮤니즘과 마찬가지로 정당-선거-의회제도를 수용한 사회민주주의-사회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진보정치 세력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sup>6</sup>

---

<sup>6</sup> 사회민주주의(사민당)은 주로 거대 진보정당(영국 노동당, 독일 사회민주당, 프랑스 사회당) 등의 노선이고, 유로코뮤니즘은 프랑스 공산당, 이탈리아 공산당-최근에는 사민당 계열 이탈파- 등 주로 좌파 반대당의 노선으로서 보다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

2012년 19대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의 민주노동당 계열 일파(NL계열인 인천연합파)와 진보신당 계열 그리고 국민참여당 계열이 진보정의당을 만들었다. 통합진보당내 공식 후보자 부정경선을 둘러싼 갈등 끝에 그리된 것이었다.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분당<sup>7</sup>에 이어 또 한 번의 분당 사태를 겪은 터라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하고, 2012년 대선과 204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진보정당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당명 개정을 포함한 노선 전환을 도모했다. (유립형) 사회민주주의를 모형으로 하는 '한국형 사회민주당'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진보정의당에서 '진보'를 뺀 정의당으로 개정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당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인천연합 계열의 반대 때문이었다. 진보정치 세력이 1980년대 이후 내내 비판해왔던 우경화된 노선인 사회민주주의(사민당)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sup>8</sup> 민주화 이후 만 27년이, 민주화 이후 진

---

적 상황에서의 경쟁과 갈등을 논외로 할 때, 양자 모두 정당-선거-의회 제도를 모두 중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진보성(차별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유로코뮤니즘은 사민당의 좌파 노선이고, 사민주의는 유로코뮤니즘의 우파 노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유로코뮤니즘과 사회민주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과 관련해서는 김수진(2001)과 F. 끌로댕(김유향 역 1992)를 참조.

<sup>7</sup> 이에 대해서는 김윤철(2011) 참조.

<sup>8</sup> 2004년 원내진출에 성공함으로써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을 대표했던 민주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동시에 민주노동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는 그만큼 진보정치 세력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었다(민주노동당 2000). 이 문구를 둘러싸고 2003년 당발전특별위원회에서 촉발된 NL계열

보정당(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한지 만10년이 지난 지금도 유로코뮤니즘-사회민주주의 노선에 대한 저항감이 남아 있는 것이다.

보수야당은 물론, 유로코뮤니즘까지 비판하는 것, 또 그 비판의 이유를 감안할 때, 1980년대 한국 진보정치 세력은 '반체제' 관점에서 정당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선거-의회를 활용한다고 해도 기성 체제에 대한 도전자, '반체제 정당'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sup>9</sup> 특히 비판 과정에서 그 이념이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서는 민중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임을 알 수 있다.

보수야당 비판은 1984년 전두환 정권의 유화 조치 이후 정치적 기회구조의 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이루어졌다. 이를 감안할 때, 비판은 보수야당을 대체하겠다는 진보정치 세력에 걸맞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비판을 통해 진보정치 세력이 보수야당을 제치고 반독재 민주화 세력의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었느냐이다. 그 어떤 세력보다도 반독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자기희생<sup>10</sup>이 컸음을 고려할 때, 즉 (도덕적) 정당성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

과 PD계열 간의 이른바 '사회주의 논쟁'에 대해서는 김윤철(2004) 참조.

<sup>9</sup> 반체제 정당 개념에 대해서는 김윤철(2009);사르토리(1995);Ware(1995) 참조.

<sup>10</sup> 이와 관련해서는 김윤철(2007) 참조. 김윤철은 1980년대 한국 진보정치 세력, 특히 그 주공급원이었던 학생운동 세력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자기희생'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하였음을 규명하고 있다.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장 제1야당의 지위를 차지하지는 못한다해도 정치적 대표체제로의 진입은 가능했을 것이다. 2004년에 가서야 이루어진 진보정당의 정당체제 진입, 즉 원내진출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들은 기성 체제에 대한 부정을 주 기조로 하여, 반체제 정당을 만드는 것에 주력한다. '초청에 의한 진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시점에 오히려 탈주를 감행한 것이다. 1987년 대선 결과에서 군부 세력에게 정권을 내준 뒤, 현실 정치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절감, 1988년 13대 총선에 민중의 당과 한 겨레 민주당을 만들어 임했으나, 이미 민주화 세력의 정칙적 대표자의 지위를 보수야당이 차지하고 난 이후였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진보정치 세력은 1990년대 내내 긴 방랑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 방랑길에 우선 쫓겨든 지팡이가 바로 '전위정당론'이었다.

### 3. '전위정당론'을 통해 본 정당관

진보정치 세력에게 정당은 기본적으로 전위당. 혹은 전위가 중심에 서는 정치조직이다. 전위조직론 혹은 전위정당론에 그들의 정당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건설하고자 하는 정당의 이념적 목표와 전략 그리고 주체 등에 대한 논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전위정당의 형상에

대해 똑같다고 할 정도로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레닌에게서 그 내용과 형식을 갖고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국가와 사회 그리고 해당 시기 정세를 모두가 러시아적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국가 권력의 폭압성을 이유로 '러시아 짜르체제'에 비견하고 있다.<sup>11</sup> 이때문에 더욱 더 레닌에게서 전위정당의 논거를 가져왔다 할 수 있다.

전위정당 건설을 표방했던 여타의 정파들<sup>12</sup>과 마찬가지로 <민중민주운동론>은 전위정당을 부르조아 정당들과 비교해서는 안되는 정당이라면서, 노동자계급의 사상이 관철되는 혁명적 정치지도부로서 노동자계급의 일부이자, 동시에 가장 잘 조직되고 훈련되어 있으며 철저한 계급의식으로 무장된 전위부대로 규정하고 있다(허성혁 1988, 98-99).

이같은 전위정당이 필요한 이유를 <민중민주운동론>은 "노동자 계급의 역량을 동원하고 과학적으로 지도하며, 나아가 동요하는 여러 계급 계층을 혁명대열에 영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에 토대를 둔 지도역량이 필수적...노동자 계급의 사상이 관철되어

---

<sup>11</sup> 이에 대해서는 김동춘(1997). 이 글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출범한 노태우 정권 시기, 즉 민주화 이행기였던 1990년에 쓰여졌다.

<sup>12</sup> NL 계열은 전위정당 건설에 나서지 않는다. 이들은 '통일전선' 혹은 '대중운동연합체'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A 계열과 PD 계열은 NL 계열에 대해,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남한의 변혁운동을 지도하는 전위정당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그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하는 조직들 가운데 오직 그 전위조직만이 혁명동력의 근본적 이익을 올바로 대표할 수 있고 혁명운동을 '끝까지' 이끌 수 있다"는데에서 찾고 있다(허성혁 1988, 277).

한편 <민중민주운동론>은 전위정당이 '사상의 중심'임을, 그것도 유일한 사상 중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직 통일된 사상 중심은 프롤레타리아 전위당"이며, "우리 사회의 민중운동에서도 유일한 사상 중심"이며, "최고로 발전된 사상 중심...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입장으로 무장한" 조직이라는 것이다(허성혁 1988, 276).

<민중민주운동론>에 따르면 이어서 '사상'을 전위정당이 갖추어야 할 첫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위정당은 전위당은 사상중심으로서, 사상적 통일체이며, 사회혁명이 요구하는 유일한 과학적 사상을 세우고 책임지며, 또 이에 따라 통일된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뒤이어 밝히고 있는 전위정당의 요건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둘째, '의지와 행동의 통일체'로서 강령과 조직의 모든 부문에서 하나같이 꿰뚫는 확고한 조직원칙 및 조직규율로 무장한 조직이어야 할 것. 셋째,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진 '전략적 권력투쟁조직'으로서 민중운동의 모든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민중권력을 세워내는 핵심적인 조직이어야 하며, 나아가 민중권력을 내용적으로 지도해낼 조직이어야 할 것. 넷째, 각급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조직으로서, 대중을 지도하는 조직이자 아울러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검열받는 조직이어야 할 것. 다섯째, 민주주의적 중앙집



중제를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sup>13</sup>으로 하는 조직이어야 할 것(허성혁 1988, 276-277).  
이 요건을 충족한 정당이 바로 전위정당인 것이다.

어찌보면, '신(god)의 조직'-혹은 '신' 그 자체-이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상 중심과 규율과 훈련의 강조, 전략적 권력투쟁과 대중에 대한  
지도의 역할, 대중으로부터의 검열(검증), 민주집중제의 채택 등은 모든 정파가 공유하  
는 전위정당의 내용과 형식이다.

<노동계급>은 강령을 통해 "남한의 사회주의자는 노동자계급의 모든 자생적인 계급투  
쟁을 사회주의적 이념과 결합시키고 다른 모든 진보적인 계급, 계층의 투쟁을 지도해  
야만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을 통일된 전체로 결합시켜 지도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침로를 제시하며, 여타 모든 진보적인 계급, 계층을 지  
도할 노동자계급 전위정당의 건설을 자신의 임무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이진경 편  
1991, 242).<sup>14</sup>

강령 해설에서는 "당 건설의 사상적 기초는 사상투쟁을 통해 통일적인 강령을 확립함

---

<sup>13</sup> <민중민주운동론>은 민주주의적 중앙집중제야말로 대중을 민주적이고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도임과 아울러 대중으로부터 참 검열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원칙이라고  
주장한다(허성혁 1988, 277).

<sup>14</sup> <노동계급>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주체를 지도하는 역할은 노동자  
계급의 전위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진경 편 1991, 311).

으로써만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당 건설을 위한 사상적 전제의 확립, 사상통일의 확립은 분명히 조직적 통일의 핵심적 전제이며, 그것 자체로 자족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질적인 조직적 통일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강령상의 원칙과 보편적 계획에 입각한 총체적인 사상통일만이 당적 수준의 조직 통일만을 담보해준다"고 말한다(이진경 편, 1991. 258-259).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은 1990년초에 들어서도 사상 중심의 관점을 지속한다. <남한사회 변혁논쟁의 현단계> 역시 "사회주의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며 묻고서는 "당 건설의 기초가 될 사상의 통일을 위한 전면적인 사상투쟁"을 우선시하고 있다(정한, 1993, 176).

한편 <민중민주운동론>은 전위정당이 당내 분파를 제거하고, 기회주의 분파를 몰아내기 위해 민주집중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부정적 의미에서의 '스탈린주의'를 연상케하는 이런 관점은 전위정당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전위정당=비민주적 혹은 반민주적 독재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전위조직은...당연히 민주주의적이어야 함과 아울러... 그 어느 조직체보다도 단단한 규율을 가져야 한다. 전위조직의 규율은 외부적으로는 전위조직의 활동을 원활히 하고 통일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필요하며, 내부적으로는 기회주의자들과 분파를 몰아내

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허성혁 1988, 99)

<민중민주운동론>은 '합법화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합법화된 경우 조직 원칙과 투쟁목표를 잘 못 설정하거나 규율이 느슨해져 기회주의적 정당으로 타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반공이데올로기를 주된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사상이 관철되는 전위조직은 거의 비합법적으로 건설된다”고 말한다. 활동이 “더욱 철저한 규율과 조직보안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반공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대중에게 폭로하는 가운데 프락션 활동을 통해 합법적인 여러 조직들까지도 그 지도 밑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허성혁 1988, 99-100). 다소 과도할지는 모르지만, '전위정당=비합법 (음모)정당'<sup>15</sup>이라는 등식의 성립과 함께, 비대중적-혹은 반대중적-인 정당관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sup>16</sup>은 활동 목적을 밝히고 있는 강령 4장에서 다음

---

<sup>15</sup> (서유립) 사회주의 정당의 조직노선으로서의 음모전략과 그것의 시대적 제한성에 대해서는 김수진(2001, 86-91) 참조.

<sup>16</sup> 인민노련은 1980년말 이후 한국 진보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정파이다. 1987년 6월26일 결성되어, 1991년 한국 사회주의 노동당-한국 노동당을 만들기 전까지 존속했다. 처음에는 NL 계열 정파와 함께 조직을 만들었으나 조직의 위상 문제-노동조합에 준하는 대중조직이나, 아니면 정치적 대중조직이나-를 둘러싸고 노동자 대중조직이어야 한다고 보았던 NL 계열이 이탈함으로써, PD 계열을 대표하는 정파가 되었다. NL 계열이 이탈하고 난 후인 1989년 10월, 인민노련은 아예 정치적 대중조직 노선을 폐기하고 전위조직 건설을 표방하는 강령을 확정한다. 절차적으로 전위조직 건설을 표방한 강령을 최종 확정된 것은 1989년 2월이다.

과 같이 밝히고 있다(이진경 편 1991, 205-206).

“인노련<sup>17</sup>은 당면한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 ...노동자들의 정치 의식을 발전시키고, 여러 형태의 대중조직을 촉진시키며,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부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정치적 통일과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한편으로 인노련은 파쇼정권에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계급 계층 및 정치세력과 적극 연대할 것이며, 특히 전민중의 정치적 통일조직을 형성해나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인민노련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전위조직(정치부대, 노동자 정당, 전민중의 정치적 통일조직)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정파들과 달리 사회주의가 아닌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 (노동자에 대한) 당의 지도보다 노동자가 스스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모든 계급 계층 및 정치세력과의 적극적 연대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대중조직 노선을 폐기했으나, 여전히 그 영향을 받으면서 전위정당의 ‘대중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사회주의자>라는 정치신문을 발간하면서 전위조직 건설을 위한 별도의 실천에 나

---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진경(1991, 208-210) 참조.

<sup>17</sup> 인민노련은 스스로를 인노련으로 부르고 있다. 1980년대 들어 처음으로 ‘정치조직’ 논의를 불러일으킨 서노련과 함께 대중정치조직을 주창했던 인노련과 다른 조직이다. 서노련과 인노련에 대해서는 유경순(2009) 참조.

선 것<sup>18</sup>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지향이 있었음에도 강령에는 전위정당의 요건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 계급과 계층 구조, 노동자들의 실제 의식 수준, 해당 시기의 정세 상황, 조직역량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목표 등을 앞세워 전위정당을 조명하는 앞의 정파들과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비슷한 시기 나온 <민중민주혁명론>과 대별된다. 강령과 문건모음집이라는 텍스트 성격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 대중에게 공개하는 텍스트임을 감안하면, 분명 접근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인민노련이 보다 '유연한' 느낌을 준다면, <민중민주운동론>은 '경직된 혹은 비장한' 느낌을 준다고 하겠다. 이후 인민노련이 한국 사회주의 노동자당-한국 노동당-민중당 등을 거치며, 전위정당 노선을 폐기하고, 합법적 진보정당 건설 노선으로 나아갈 것임을 이미 '예고'하는 있는 것일 수도 있다.

CA 계열인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사노맹)의 <노동해방문학>을 잇는 이론 사상 논쟁 무크지인 <우리사상>은 1980년대 한국 진보정치 세력들의 정당관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시켜준다. '정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그에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상>은 "당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이 물음 속에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운동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맑스주의 정당관'을 피력한다. "맑스주의에 따르면 당은 '계급투쟁의 무기'"인 동시에,

---

<sup>18</sup> 이에 대해서도 유경순(2009) 참조. <사회주의자>는 4호까지 발간되었다가 중단된다. 노회찬과 황광우 등 주도적 역량이 공안당국에 의해 검거, 구속되었던 것이 큰 이유였다.

“계급의 일부분이며, 그 계급 중에서 가장 진보되고, 가장 훈련되고, 또 간고히 단결된 지도적 전위분자가 결집된 조직체”라는 것이다(김정명 1992, 32).<sup>19</sup> “이러한 관점은 레닌에 의해 더욱 진전되어 부르주아 정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당이론, 즉 ‘직업적 혁명가를 중심으로 한 전위정당론’이 제기된다”고 말한다(김정명 1992, 33).

<우리사상>은 전위정당론을 내세우는 과정에서도 서구 국가의 정당에 대해 언급한다. 자신들과 달리, “이탈리아 좌익민주당(구공산당)을 비롯하여, 프랑스 공산당, 일본 공산당 등 현대 유로코뮤니즘 공산당들은 레닌주의적 정당이론에는 다소 입장을 달리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노동자계급 정당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되, 맑스레닌주의 당이론을 교조적으로 적용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당이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끝이어서 “여기서도 여전히 분명한 점은 당 건설의 전제로써, ‘총자본의 물질적 힘에 대한 총노동의 물질적 힘인 조직을 통한 단결없이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꿈꿀 수 없다’는 당이론의 명제”라면서 자신들의 전위정당론을 정당화한다(김정명 1992, 33).

<우리사상>은 기성 정당을 비판했던 것처럼 기성 정치학을 부르조아 정치학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현대 부르주아 정치학자들에게 당이란 ‘상이한 계급 간의 조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부르주아 대의체제의 조정기구”로서, “그들은 정당의 이념보다는 정당제도 자체를 중시하고, 정당간의 막후교섭과 협상을 통한 지배체제의 위기를

---

<sup>19</sup> <우리사상>은 맑스가 기초한 국제노동자협회의 <일반규약> 제7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김정명 1992, 32).

해소역할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맑스주의 정치학에 있어서 정당이란 계급 간의 대립의 산물이자, 투쟁의 수단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즉 “당은 처음부터 낡은 질서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정치투쟁의 과정에서 생성되었으며, 그 지배계급에 맞서는 피지배계급의 가장 선진적이고 전투적인 ‘부분’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이다(김정명 1992, 33-34).

이런 언명의 선상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자신들의 전위정당을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정당 유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념 속의 정당’이 아니라, ‘현실 속의 정당’으로 전위정당론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대중적 전위정당’이라는 앞의 정파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전위정당론’의 주창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볼 수 있다.

“우선 사회 지배층을 대변하는 부르주아적 정당이 있다. 이 유형은 주로 인물위주로 운영되며, 재정의 조달 역시 몇몇 특수한 개인의 후원금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일본의 자민당, 남한의 민자당, 민주당 등 보수정당들이 이에 속한다. 또 하나의 유형으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당이 있다. 그들은 제2인터내셔널에 뿌리를 둔 개량주의 정당으로, 지부와 회비중심으로 운영된다. 영국의 노동당, 스웨덴의 사민당, 일본의 사회당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세째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공산당 내지 노동자당이 있다. 이 당은 민주집중제의 원리에 의해 조직된 새로운 유형의 당이다. 첫번째와 두번째 유형의 정당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번째 유형의 정당은 매우 낯설다. 우리가 지향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노동자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편에 서고자 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당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위의 제3유형의 정당 중 한 부분이다.” (김정명 1992, 34-35)

<우리사상>의 전위정당론 정립을 위한 이와 같은 방식의 작업은 <민중민주운동론> 등 다른 정파들의 접근과 달리, 부르조아 정당론-맑스주의 정당론의 비교, 특히 역사적 경험과 현실을 통해 목도하고 있는 실제 정당들을 사례로 삼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이다.<sup>20</sup> 이는 긍정적 의미를 갖는 바, 학문적 혹은 이론적 정교함 때문이 아니라, 전위정당 ‘모형’을 이념적 당위의 차원에서 도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실적 가능성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유의 계기’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사상>은 대중적 전위정당론이라는 새로운 전위정당론을 주창하기에 이르른다. 이는 레닌에 대한 ‘재독해’에 바탕한 것이었다.<sup>21</sup>

---

<sup>20</sup> 비교는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방법(론)이다. 사회과학을 과학일 수 있게하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웅진 외(2014) 참조. 사회구성체 논쟁은 물론,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의 정립 과정에서 1980년대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지점이다. 최근에는 서구 유럽 등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비교의 대상을 국가 규모 등에서 너무 차이가 많은 서유럽 국가들에 한정하지 말고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sup>21</sup> 이 부분은 같은 글이지만, 1990년대초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사상> 제2호에 실린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라는 문건은 1988년~1992년에 걸친 CA계열의 정당론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진보정치 혹은 진보정당 연구



“현실 속에 존재하는 당은 결코 ‘무오류의 조직’이 될 수는 없다. 또 당이 완벽하고 철저한 정치지도자들로만 이루어질 수도 없다. 그것은 우리의 지향과 노력의 방향이 될 수는 있지만 현실은 아니다...당을 권위의 상징, 올바름의 상징, 지도의 상징으로 보는 과거의 생각은 모두 씻겨져야 한다. 당은 절대선과 동일시되기보다는 혁명투쟁의 과정에서 가장 철저하고 전투적인 세력들의 결집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 당은 소수의 가장 탁월한 엘리트의 결집체가 아니라, 혁명의 미래를 위해 가장 성실하고 철저하게 투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전투조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김정명 1992, 48).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직업적 혁명가로만 구성되는 전위조직이라는 관점의 교정이 필요하다...러시아에서만 해도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제기했던 ‘직업적 혁명가의 조직’으로서의 당은 순전한 직업적 혁명가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선진노동자와 대중조직의 지도적 부분의 결합 속에서 건설되었다.”(김정명 1992, 49)

“남한 사회주의혁명운동의 비합법적 조건이 엄격하게 선발되고, 고도로 훈련된 활동가

---

는 그 시기 설정에 있어 ‘1980년대’와 같이 10년 단위로 끊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져 보자면 한국 민주화 역시 마찬가지다. 1980년대 민주화 이행-1990년대 민주화 이후 식으로 볼 수 없다. 공안정국, 91년 5월 투쟁 등을 고려할 때, 노태우 정권 시기까지 민주화 이행기로 봐야 한다. 반독재 민주화 체제의 작동 기준은 87년 6월 항쟁이 아니라, 92년 12월 혹은 93년 2월 김영삼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봐야 한다.

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의 '대중적 성격'을 특별히 강조해야 한다...당의 '전위적 성격'만을 강조하고, '대중적 성격'을 축소하게 된다면...고도로 발전한 남한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 광범위한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영향력을 갖는 정당으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단순한 '전위조직'이 아니라, '대중적 전위조직'이어야 한다...'전위적 대중조직'이 아니고, '전위적 전위조직'도 아닌, '대중적 전위조직'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전체 사회주의진영의 공통된 과제인 것이다." (김정명 1992, 50-51)

<우리사상>은 대중적 전위정당론을 내세우면서도 혁명적 활동과 과학적 이데올로기는 중요하며, 사회주의의 대의를 보다 철저하게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대중적 전위정당의 건설은 더욱 철저한 전위주의의 구현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김정명 1992, 52).<sup>22</sup>

한편 <우리사상> 역시 합법/비합법 문제에 대해 언급한다. <민중민주운동론>과 사뭇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실제 사노맹의 '공개적' 실천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문제의식의 차원에서 전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우리사상> 역시 점차 인민노련과 마찬가지로 합법정당으로 나갈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sup>22</sup> <우리사상>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반제-민족해방, 반파쇼-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자신의 전략(목표)으로 삼는 정당"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전위당을 ‘지하조직’으로 사고하는 견해...사회주의가 ‘지하’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만큼 잘못된 생각은 없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결코 ‘지하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 당은 지하의 비밀결사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활동하는 조직이다. 지하의 비밀결사는 대중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중운동의 정치적 지도부이자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전위정당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하조직’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활동하는 대중적 전위정당’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조건으로 본다면 전위조직의 주요 부분이 ‘비합법’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합법조직’과 ‘지하조직’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비합법이라는 것은 반동권력과 지배권력이 사회주의진영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형성된 활동의 한 단면일 뿐이다. 반동권력이 합법공간을 열어놓지 않는 조건 속에서도 사회주의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비합법조직이 되긴 했지만,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하조직’이 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주의진영은 비합법적 조건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공공연한 활동을 지향한다.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사노맹)>의 공공연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그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김정명 48-49)

폐쇄적 구조와 비대중적인 음모전략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전위정당(론)은 그 현실적-이론적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진보정치 진영 혹은 운동사회 내에 일련의 ‘위계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는 진보정치 세력이 사회적 기반을 확보, 확장하는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배제와 포괄, 지도와 피지배의 경계가 분명한만큼 그들은 소수로 고립될 수 밖에 없었다.

19세기 러시아 특수 상황의 산물인 레닌의 전위정당론에 기대어 이념과 사상을 앞세운 정치적 언어를 쓰니, 대중친화성에 있어서 자신들이 비판하는 보수야당을 앞설 수 없었다. 이는 이론적 언사를 즐겨쓰며 전위정당론 주창을 선도한 PD 계열의 진보정치 세력이 '경쟁세력'인 NL 계열에게 대중성과 조직력에서 열세를 보인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민노련 등이 비교적 빠른 시기-2,3년만에-전위정당 노선을 폐기하고 합법성과 대중성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전환했지만, 확인한 것은 대중적 지지를 얻어낼 실력의 미비였다. 이는 고참 운동가와 명망가가 주축을 이룬 한겨레 민주당이나 민중당도 마찬가지였다. 민주화의 주축세력이라는 기운을 타지 못하고 '바닥'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정치세력에게 대중들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데다가, 이미 시작된 기성 정치체제에서의 '빅게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정파당'에 머물 전위정당 건설이라는 허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보수야당에 견줄만한 대중적 친화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그것을 표현할 정치적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한, 진보정치 세력의 민주주의적 대표체제로의 진입은 어려웠다. 1990년대 한사노-한노당-민중당-국승21의 실패로 이어진 진보정치 세력의 고군분투가 그 현실을 보여준다. 다만 1990년대말 다시금 기회를 제공받는다. IMF 위기와 사

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기성 보수정치 세력의 부정부패와 무능에 따른 정치 개혁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의 상승이 그것이다. 2000년 낙천 낙선운동 열풍과 16대 총선, 2002년 16대 대선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 2004년 17대 총선에서의 탄핵정국 등에 이르는 시기, 십수년만에 진보정치 세력에게 기회가 온 것이었다. 주체 역량에 상관없이 무대에 서게 되는 기회가.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은 그래도 합법적-진보적 대중정당 노선을 걷고 있었기에 일단 그 무대에 설 배우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의 염원을 달성한 것이다.

#### 4. 나오며

1990년대에 들어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은 정당관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여준다. 그 변화의 선봉에 선 것은 인민노련이었다. 인민노련은 한국 사회주의 노동자당 창당준비위를 거쳐 한국 노동자당 창당-민중당 합류의 길을 걷는다. 이 과정에서 인민노련은 전위정당론을 폐기한다. 이른바 '신노선'을 주창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의 진보정당들은 -통합진보당 주류파를 제외하고는-이 신노선에 기반해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 진보정당을 대표한 민주노동당은 전위정당 노선을 폐기한 합법적-진보적 대중정당 노선에 바탕해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우리사상>이 비판한 유로코뮤니즘보다도 더 '우경화'된 노선으로 비판받는 사회민주주의-사회민주당 노선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sup>23</sup>

이 시기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들은 대체로 전위정당 노선을 폐기하고 합법정당 노선을 취했다는 이유로 인민노련(한사노-한노당)의 신노선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우리사상>의 '대중적 전위정당론'과 같은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합법성 역시 그 자체로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1993년에 씌어진 <남한사회 변혁논쟁의 현단계><sup>24</sup>는 사실상 91년에 씌어졌을 <우리사상>과 거의 유사한 인식을 보여준다. <민중민주운동론>이 보여줬던 스탈린주의적 편향-당의 무오류성과 음모적 전략을 연상시키는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전히 보수야당을 비판하고, <노동계급>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를 직접적인 이념으로 표방하였으나, (맑스) 레닌주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반성과 대중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당 건설이라는 과제에 대해 지금껏 남한의 사회주의 운동은 두 가지 편향과 오류를 거듭해 왔다. 첫번째 편향은 러시아에서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남한 사회

---

<sup>23</sup> 주대환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 모형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다당제-합의제에 바탕해 있는 등 정치환경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노동자 대중조직에 기반해 있다는 점, 그리고 진성 당원제를 취했다는 점에서 독일 사회민주당 모형도 참조했다고 볼 수 있다.

<sup>24</sup> 이 책의 출판사인 '과학과 사상'은 레닌 전집 등의 출간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전진 그룹'의 후신이다. PD 계열의 한 정파라고 할 수 있다.

의 변혁에 적용시키고자 했던 시도들에서 나타난다...” (정한 1993, 166)

“남한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은 대중에 의해 지지되고 대중의 참여에 의해 활동하면서 전위의 과학적 지도와 전략전술의 슬로건들이 대중에 의해 실현된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기회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어느 대중정당보다 더욱 ‘대중적인’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정당이 될 것이다.” (정한 1993, 175).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들이 결국 인민노련-한사노-한노당-민중당-국민승리21의 궤적을 밟은 인민노련이 주도한 민주노동당으로 ‘결집’한 역사적 맥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민노련 노선’의 승리라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 변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비판 대상과 정치적 동거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2002년을 경과하면서도 전위정당론은 물론 진보정치의 독자 세력화에 비판적 혹은 소극적이었던 NL 계열마저도 민주노동당에 합류한다. ‘민주노동당 모형’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때늦은’ 원내진출은 진보정당의 ‘때 이른’ 침체라는 아이러니의 시작이었다. 자신들이 비판했던 보수야당-당시는 집권 정당- 세력과 동반 침체의 길을 걸으며, 내분에 빠져들었고 분당 사태까지 겪으며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원내진출 이후 대중성(핵심 지지층의 확장을 통한 사회적 기반의 형성) 확보에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1980년대와 같은 정파 이념을 둘러싼 갈등을 재연한

것의 결과였다. '분열-위기-통합-위기 극복-(재)분열-(재)위기'라는 보수정당의 사이클<sup>25</sup>을 진보정당 역시 그대로 밟은 것이다.

'어긋남'.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은 1980년대 이후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가운데, 노동자와 서민의 명실상부한 정치적 대표자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는 한국 사회에 걸맞지 않는 급진적 변혁이념을 추종하느라 보수야당에게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고스란히 내주었고, 민주화 이후인 1990년대에 들어 오히려 더 엄혹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스페인 사회노동당이 민주화 이후 주요 정당으로서 역할한 것<sup>26</sup>과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또 다시 어긋남. 2000년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IMF 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 보수정치 세력의 불합리함과 부정부패를 이유로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했다. 낡은 정치 청산을 기치로 내걸은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민주노동당이 덕을 본 정당명부 1인2표제의 도입은 그러한 선상에서 이루어졌다. 2004년 총선 시기 보수정치 세력에 대한 비토로 이어져,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획득과 민주노동당의 원내 10석 획득을 가능케 했던 탄핵정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정치를 주

---

<sup>25</sup> 이에 대해서는 심지연(2009) 참조.

<sup>26</sup> 이와 관련해서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1989)와 제프 일리(2002) 참조. 역사적 맥락과 구조적 환경의 차이가 있겠으나 주체 역량과 전략적 선택의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 사회노동당은 이념적 차별성 보다는 국왕을 중심으로 통합과 안정을 내세우며 정치변동기에 적응해갔다.



도하는 세력의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김대중-김영삼이라는 정치지도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직선제 개헌을 주도해 대표성을 회복한 보수야당이 버티고 있었던 1980년대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제공받은 것이었다. 2012년 19대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2004년 이후 민생개선의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군소정당으로서의 취약함만 보인 진보정당에게 국민들은 2004년보다 많은 13석의 의석을 선사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MB야당연합에 지지를 보내준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늘 1980년대 정파이념의 표출이었고, 당내 정파 갈등이었고 분당이였다. 그 끝에 목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진보 다수당 체제'이다. 2014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거치며 진보정당은 '위기 중의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혹자는 '진보정당 없는 정당체제'를 거론하기도 한다. 이는 진보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보수 정당 주도의 정치가 강자와 약자의 공존을 위한 복리 증진을 도모할 가능성이 낮다는 암울한 전망을 담고 있는 진단이다.

지금은 1980년대말에서 1990년대초를 거치며 등장했던 '신노선'의 새로운 버전이 등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신노선이 나오고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신노선이 나왔다고해서 당장 진보정당이 부활할 것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시대 상황과 어긋나는 선택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정당의 건설이 다시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노선 전환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신노선을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 일단 비판보다 대안을, 이념과 모형보다 삶에서 그 답을 찾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에 주목할 수 밖에 없으리라.

이념의 새로운 이름이 아닌, 국민의 원래 이름, '주권자'라는 이름을 찾아주는 데에서 시작하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행보를 위해서.

<참고 문헌>

김동춘. 1997.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창작과 비평사.

김수진. 2001. <민주주의와 계급정치:서유럽 정치와 정치경제의 역사적 전개>. 백산서당.

김웅진 외. 2014. <비교정치론 강의1>. 한울아카데미.

김윤철. 2011. "민주노동당 분당: 연대 유인의 '다층적' 약화와 '대안'으로서의 분당," <한국정당학회보> 통권18호. 101-136.

김윤철. 2009. <정당>. 책세상.

김윤철. 2007.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 리더십: '자기희생적' 리더십과 '정파적' 리더십," <기억과 전망> 제17호. 278-310.

김윤철. 2004.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 논쟁:이념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통권 68호. 65-80.

김정명. 1992.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우리사상> 제2호. 16-80.

김태일. 1990. "보-혁 갈등구조론과 민주-반민주 갈등구조론: 지배세력의 시각과 민민

- 세력의 시각.” <90년대 한국사회의 쟁점>. 한길사.
- 끌로맹, F(김유향 역). 1992. <유로코뮤니즘과 사회주의>. 새길.
- 문영호. 1989. <반제반파쇼 운동론:개량적 변혁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온누리.
- 민주노동당. 2000. <민주노동당 강령: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중운동연구소 편. 문용식 외 정리. 1989.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 사르토리, G(어수영 역). 1995. <현대 정당론> 동녘.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1989. <제3세계의 민주화와 한국의 위상>. 인간사랑.
- 심지연. 2009. <한국 정당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사>. 백산서당.
- 유경순 2009.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의 형성과 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진경 편. 1991. <한국 사회와 변혁이론 연구>. 민맥.
- 일리, 제프(유강은 역). 2008. <The Left:1848-2000>. 뿌리와 이파리.
- 정 한 1993. <남한사회 변혁논쟁의 현단계>. 과학과 사상.
- 허성혁. 1988. <민중민주운동론>. 참한.
- Ware, A. 1996.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